



4면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추진단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음 5월 23일) 제376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1만3000명 전수조사 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위기 가구 선제 발굴·복지 자원 적극 연계 조사 계기로 복지 전달체계 기반 재점검·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민간 복지 자원을 적극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은 17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얼마 전에 익산에서 일어난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1만3,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도내 14개 시군의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과 읍면동 맞춤형복지 팀 등 총 745명이 참여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일부 기준 미달로 인해 수급이 중지된 자로, 현재 기준에 비추어볼 때 지원이 가능한 가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의 경우, 생계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판정되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기초연금 등 공적 급여 신청 △긴급한 자원 연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연결된다.

특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존 초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망을 제공하는 도 자체사업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사를 계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로 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는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와 급여 중지 절차 이후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중지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맞춤형 상담 및 재접촉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신청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사후 직권 신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된다. 이 부분은 또한 기존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 개입하고, 직권(동의) 신청을 강화해 위기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제도 역시 완화된 기준으로 확대 운영된다. 도는 위기 상황에서의 선제적 개입 강화를 위해 금융 재산 기준을 기존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긴급 돌봄 대상 인원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단기 돌봄 공백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 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정서적 소진 방지 프로그램도 강

화된다.

전북자치도는 심리상담, 위기 사례 대응, 복지 정보 연계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고, ‘행복멘토링 워크숍’ 참여 인원을 기존 24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공무원 간 경험을 공유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들이 극한 상황에 방치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돌보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현장 자료를 토대로 복지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위기 발생 전 개입 가능한 ‘예방형 복지’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도민 누구나 복지안전망 안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새만금에 투자하세요”

BIO USA 참석, 공공외교활동 등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광영 도지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1 Penn Plaza)에서 블룸버그, 씨티은행,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세계적 민간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북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새만금과 금융허브도시 조성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넓은 도시계획 규제 개선, 도시 성장 기틀 마련

전주시, 민선8기 출범 후 용적률 완화 등 규제 개선 집중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둘씩 걷어내면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통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해 왔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성장기반을 다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민선8기가 출범한 지난 2022년에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적절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강도 높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건축경기 침체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허용 △표고·경사·입목축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시는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지난 1997년부터 공원 주변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높이 제한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가 어렵고 주변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커진 공원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시는 고도지구 내 노후 건축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시는 올해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가 지정관리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건물·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해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의 개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계획된 도시기반 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해 그동안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쏟아지는 햇살 아래
푸르른 숲바람
새하얀 물보라
마음을 씻기는 여름

가자, 우주로!

시원한

자연특별시 우주의 여름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자연특별시 대표관광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문의 1899-8687